

## 뇌물수수 혐의 화천군 공무원 구속영장

업체 대표 2명 입건 여죄 수사중

화천경찰서는 지난 31일 특정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화천군청 6급 공무원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화천군청 자체사업 발주 및 업체선정 과정에서 사업비 규모를 조건(일명:분리발주) 이후 관내 특정 업체를 선정해 주고 그 대가로 업체 대표 B(53)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또 2015년 10월13일 시설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어 도급계약을 할 수 없는 공사업체 대표 C(48)씨와 짜고 허위인물 끼워넣기, 근로일수 부풀리기 방식으로 공사비를 인건비로 바꿔 편법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는 등 모두 1,18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뇌물을 준 업체 대표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A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했다.

화천=정래석기자 redfox9458@

공사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화천군청 공무원 구속영장

공사 편의제공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공무원과 해당 업체 대표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화천경찰서는 공문서 위조와 뇌물수수 혐의로 화천군청 6급 공무원 A(53)씨를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업 발주 및 업체선정 과정에서 분리발주로 특정 업체를 선정, 업체 대표 2명으로부터 총 118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또 지난해 10월 시설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어 도급계약을 할 수 없는 업체 대표와 짜고 허위 인물 끼워넣기, 근로일수 부풀리기로 공사비를 인건비로 바꿔 편법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원명

# 지자체 공사, '工期지연 배상금' 절반으로 줄어든다

지자체 공공건설 공사의 공기 지연에 따른 배상금이 70여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제한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는 물품·용역 공사는 실적도 발주대상 규모의 3분의 1 수준만 충족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지자체의 대가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율에 비해 과도했던 시공업체의 지연배상금률을 절반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설공사의 경우 하루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10.1%의 비율로 부과해 온 지연배상금률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000분의 1'서 '1000분의 0.5'로

연이자율로 환산한 36.5%→18%

## 시공업체 과도한 부담 해소 기대

은 1000분의 0.5(0.05%)로 완화된다.

이를 연이자율로 환산하면 36.5%에 달하던 지연배상금률이 18%로 내려간다.

이는 시중 연체이자율(평균 10% 수준)과 계약 이행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위약금 8% 정도를 감안해 조정된 것이다. 지난해 지자체가 겪었던 지연배상금

총 1628건, 63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지연배상금률이 조정되기는 지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정부는 1995년 제정된 국가계약법과 2006년 마련한 지방계약법령의 모태인 건국 당시 '재정법'부터 현재까지 1000분의 1을 고수해 왔다. 이는 건국 당시 일본의 계약법령을 준용한 데 따른 것으로, 발주자는 대가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율이 10%에 그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더욱이 현행 계약법령을 준용한 일본조차 지연배상금률이 2.8%에 불과하고, 프랑스는 12.2%, FIDIC(국제건설컨설팅엔지니어링연맹)가 정한 국제건설 프로젝트 계약약관에서는 5~15%의 지연배상금률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물품 제조 및 구매 1000분의 1.5→1000분의 0.8 △용역 1000분의 2.5→1000분의 1.3 △운송 보관 및 양곡 가공 1000분의 5→1000분의 2.5 등으로 지연배상금률을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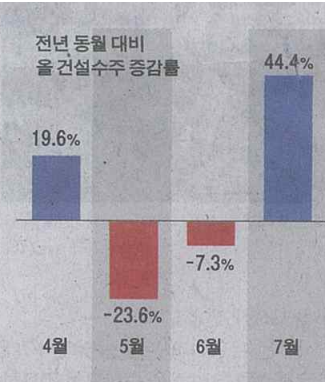
개정안도 지자체가 제한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는 물품·용역 공사에 필요한 실적을 발주대상 규모의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그동안 제한입찰은 발주 물량과 동일한 실적을 갖춘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 자격을 부여해 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최근 지방계약법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는 5000만원 이상 물품이나 용역 발주 시 사전에 규격을 5일간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정 규격 반영으로 인한 입찰 비리를 방지하고, 입찰 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기 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연배상금률 및 제한입찰 실적 완화는 국가계약법령에 선행한 것으로 건설업계의 공기 지연에 따른 부담을 덜고 실적이 부족한 창업·중소기업에 공공 조달시장 진입 기회를 넓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하연기자 chr@



## 건설수주 3개월만에 증가세 전환

통계청 집계, 7월 12조5401억  
지난해 동월보다 44.4% 늘어

건설수주가 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건축 부문과 토목 부문,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모두 호조를 보인 결과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건설수주(경상)는 12조5401억원으로 전년 동월(8조6849억원)보다 44.4% 증가했다.

건설수주는 올 4월 전년 동월 대비로 19.6% 증가한 이후 5월 23.6% 감소로 돌아서고 6월에도 7.3% 축소되며 2개월 연속 부진에 빠졌다. 그러다가 7월 들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하반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공종별로는 건축 부문이 9조5745억원

을 수주하며 전년 동월(7조1361억원) 대비 34.2% 증가했고 토목 부문 수주도 전년 동월(1조5487억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2조9656억원을 기록했다.

발주자별로 보면 공공 부문이 3조6411억원으로 전년 동월(1조7913억원)에 비해 103.3% 급증했고 민간 부문도 8조2261억원의 실적으로 전년 동월(6조8167억원)보다 20.7% 늘어났다.

건설기성은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 7월 건설기성(불변)은 8조8006억원으로 전년 동월(7조2484억원)보다 21.4% 증가했다. 건설기성은 작년 6

월 전년 동월 대비로 0.5% 증가한 이후 꾸준히 한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건축 부문이 6조846억원으로 전년 동월(4조9364억원)보다 23.3%, 토목 부문이 2조7160억원으로 전년 동월(2조3119억원) 대비 17.5% 늘어났다.

한편 7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1% 감소했다. 지난 4월 0.7% 줄어든 산업생산은 5월 2.0%, 6월 0.6%로 반등했지만 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광공업 등에선 늘었지만 서비스업 부문에서 부진한 영향이 컸다. 박경남기자 knp@

## 8월 건설사 체감경기, 올들어 최고

### BSI 75로 전월보다 7P 상승

8월 건설사들의 체감경기지수가 연중 최고를 나타냈다.

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건설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5로 전월보다 7포인트 상승했다.

BSI는 기업이 실제로 느끼는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다. 지수가 100 이하면 경기를 나쁘게 보는 기업이 좋게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다. 100 이상이면 그 반대다.

은행권 대출심사 강화를 골자로 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지난 2월 59까지 떨어졌던 건설업 BSI는 분양시장 호조에 따른 실적 개선 등의 영

향으로 매달 조금씩 올랐다.

정부가 지난 8월25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강도가 예상보다 강하지 않다는 분석에 따라 건설업 BSI는 꺾이지 않고 올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애초 건설업계에서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비롯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선일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수요 억제 정책이 아닌 공급량 조절에 중점을 두고 있어, 주택분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남영기자

# 동해고속도로 동해~삼척 구간 9일 개통

7년5개월만에 공사 마무리  
양양~속초구간은 연말 완공

교통불편으로 멀기만 했던 강원 동해안의 남북이 가까워진다.

31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동해고속도로 동해~삼척 구간이 곧 개통하고 연말에는 양양~속초 구간이 개통함에 따라 속초에서 삼척까지 이동 시간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두구간의 공사가 끝나면 속초~삼척의 이동시간이 2시간7분에서 1시간 가까이 줄어 1시간4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동해~삼척 간을 잇는 동해고속도로 4

차선(폭 23.4m) 18.6km 구간이 오는 9일 정식 개통한다. 동해에서 막혔던 동해고속도로가 삼척까지 연결되는 것이다.

2009년 착공해 총 사업비 6019억원을 투입해 7년5개월 만에 개통을 앞뒀다. 조경, 가드레일 등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이 구간에는 나들목 2개가 들어서고 전체 구간 중 44%인 8.2km가 터널(7개), 교량(22개)으로 이뤄졌다.

이 구간이 개통하면 동해 나들목(IC)에서 삼척시 근덕면 평방리 남삼척 나들

목까지의 주행 시간이 현재의 32분에서 11분으로 대폭 줄어든다.

상승차중 구간인 국도 7호선 동해~삼척 구간 교통량을 분산해 교통량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동해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국도 7호선을 운행하는 차량이 합류하면서 상습 정체를 빚는 삼척~동해시효가동 구간의 교통체증이 해소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영동 남부지역 교통망 확충에 따른 지역개발 촉진,

관광사업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역경제 발전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동해고속도로 속초~양양 구간 20.5km 구간이 연말 개통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까지 강원 동해안이 1시간대로 한결 가까워진다. 또 지난 2009년 시작된 동해안~양양 간 고속도로도 2017년 상반기 개통 예정이어서 동해안 접근성이 대폭 개선된다.

## 아하! 그렇구나

###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Q

수급인 甲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신속한 건물을 3년이 넘게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신축건물의 매수인 乙이 나가달라고 요구한다. 甲은 계속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A

공사대금채권도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민법 제163조 제3호) 수급인이 3년간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상대방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도급받은 공사대금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한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549 판결).

"도급계약상 도급인에게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협력의무는 계약에 따른 부수적 내지는 종된 채무로서 민법 제 163조 제3호에 정한 '공사에 관한 채무'에 해당하고, 주된 채무인 공사대금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도급인의 주장에는 종된

채무인 위 공사 협력의무의 시효소멸 주장도 들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당사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단기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하도급받은 공사를 시행하던 도중에 폭우로 인하여 침수된 지하 공사장과 붕괴된 토류벽을 복구하는 데 소요된 복구공사대금채권을 공사대금채권이 아니라 약정금으로 청구하면서 일반 민사채권이라고 주장하여도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7185 판결).

앞의 사례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공사대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다면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하여 유치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